

# 목차

01 연구개요	2
1_연구배경 및 목적	2
2_연구내용 및 방법	4
02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과 그 조건	6
1_복지국가의 의의와 주요 유형	6
2_한국사회 복지정책의 주요 여건 및 현황	14
3_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: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조건	31
03 복지재정 여건 및 중장기 전망	38
1_한국의 복지재정 주요 여건	38
2_국가-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	61
04 복지재정을 둘러싼 정책과제	78
1_국고보조사업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	78
2_증대되는 재정압박에 대응하는 복지재정 확충	82
3_비효율적 복지지출의 체계적 개선	90
05 서울시 복지재정 건전화 방안	98
1_복지재정 확충의 기본방향	98
2_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전략	99
3_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합리적 개선	120

4_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적 방안	132
5_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	137
참고문헌	147



**표**

[표 2-1]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목적	7
[표 2-2] 에스핑-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 특성	8
[표 2-3]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특성 비교	9
[표 2-4] 한국 복지국가의 현 단계 진단	11
[표 2-5] 한국의 복지발전사	12
[표 2-6] 한국의 소득불평등수준 요약	16
[표 2-7]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, 고용보험 가입률	18
[표 2-8] 중장기 재정전망(2014~2060)	19
[표 2-9] 의무지출의 분야별 장기 기준선 전망	19
[표 2-10]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(2012)	21
[표 2-11]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(2011)	22
[표 2-12] 국가별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(2012)	23
[표 2-13] 흑자법인의 공제감면세액 금액 및 비중	23
[표 2-14] 국세 및 지방세 비중 변화(2006~2012)	24
[표 2-15]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(2011년 10월)	29
[표 2-16]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비 규모 및 상대적 비중	30
[표 2-17]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찬반 논리	32
[표 3-1]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입 현황	39
[표 3-2] 국가의 세수입 주요 현황: 중앙재정 대 지방재정	40
[표 3-3] 중앙정부의 지출 현황	42

[표 3-4] 지방정부의 지출 현황	43
[표 3-5] 중앙정부의 사회복지·보건 지출 현황 및 추세	44
[표 3-6] 지방정부의 사회복지·보건 지출 현황 및 추세	46
[표 3-7] 서울시 및 광역 시도 세입 현황	47
[표 3-8] 서울시 지방세 현황	48
[표 3-9] 서울시 세출예산 현황	49
[표 3-10] 서울시와 광역시 및 도의 주요 세출항목 비교	50
[표 3-11] 서울시 본청 사회복지 지출 및 보건 지출	51
[표 3-12] 복지지출 비중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여건 비교	52
[표 3-13]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	53
[표 3-14] 자치구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현황	54
[표 3-15] 자치단체 간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 비교	55
[표 3-16]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사례	57
[표 3-17]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비중	58
[표 3-18]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현황	59
[표 3-19] 지원대상별 사회복지보건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(2015년 기준)	60
[표 3-20] 국회예산처 장기재정전망 결과	64
[표 3-21] 국가 재정지출과 의무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	65
[표 3-22] ARIMA 모형별 검정 결과	67
[표 3-23] 서울시 증장기 세입 전망(2015~2060)	70
[표 3-24] 비복지 분야 서울시 증장기 세출 전망	71
[표 3-25] 서울시 증장기 재정지출 전망: 3대 국고보조사업	72
[표 3-26] 서울시 증장기 재정지출 전망: 3대 국고보조사업 제외	73
[표 3-27] 서울시 분야별 증장기 재정지출 전망(2015~2060)	74
[표 3-28] 중앙정부 재정수지 전망(2015~2060)	75

[표 3-29] 서울시 재정수지 전망(2015~2060)	75
[표 4-1]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	78
[표 4-2]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현황〔보조금법〕 <별표 1> 기준)	80
[표 4-3]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비교(2012)	84
[표 4-4]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(2013)	85
[표 4-5]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	85
[표 4-6] 국가별 법인세 실효세율 비교(2013)	87
[표 4-7] 흑자법인의 공제감면세액 금액 및 비중	88
[표 4-8]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(2013)	89
[표 4-9] 법인세 세율의 시기별 변화 추이	89
[표 4-10] 서울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(2010~2014)	90
[표 4-11]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(2014년 7월 말 기준)	91
[표 4-12] 어린이집 보육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(2009~2013)	94
[표 4-13] 어린이집 부정수급 행정처분 현황(2012)	94
[표 4-14] 어린이집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현황(2012)	95
[표 5-1]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(2013년 기준)	100
[표 5-2]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현황(2013년 기준)	101
[표 5-3]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	103
[표 5-4] 소득세 세수추계 결과(2013년 기준)	104
[표 5-5] 소득세 세액공제액 및 세액감면액 10% 축소 시 세수효과	105
[표 5-6] 소득세 개편 시 세수효과	105
[표 5-7] 현행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	106
[표 5-8]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현황(2013년 기준)	106
[표 5-9]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된 논의 비교	108
[표 5-10] 법인세 세수추계 결과(2013년 기준)	109

[표 5-11] 법인세 개편 시 세수효과	110
[표 5-12] 공동세원화에 따른 세수확충 주요 내역	111
[표 5-13] 중앙 대 지방 세원 배분	112
[표 5-14] 지역별 세수추계: 2014년 현재	114
[표 5-15] 지역별 세수증대 추계: 징수액 기준	115
[표 5-16] 지역별 세수증대 추계: 복지재정 지출 기준	116
[표 5-17] 분권교부세 기준(2014년)에 의한 지역별 세수증대 추계	117
[표 5-18] 분권교부세 기준에 의한 지역별 세수증대 추계	119
[표 5-19] 차등보조율 적용 국고보조사업 현황	121
[표 5-20] 대안 1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변경안	125
[표 5-21] 유형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시뮬레이션 결과	126
[표 5-22]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변경안(지방기준 적용)	127
[표 5-23] 대안 2에 따른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예산효과(2015년 기준)	128
[표 5-24] 대안 3에 따른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안	130
[표 5-25] 대안 3에 따른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예산(2015년 기준)	130
[표 5-26] 연도별 지방소비세 운영 규모(지역상생발전기금 미산정)	132
[표 5-27]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방소비세 보전 전망	133
[표 5-28] 지방소비세 확충 방안별 세수증대효과	134
[표 5-29]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	135
[표 5-30] 서울시 지방소득세 법인분 세수추계 결과(2013년 기준)	136

# 그림

[그림 2-1]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(2012)	13
[그림 2-2] 한국 및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(1995~2014)	14
[그림 2-3] 연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변화(2003~2013)	16
[그림 2-4]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(2005~2014)	17
[그림 2-5] 한국의 총수입-총지출 전망(2014~2060)	20
[그림 2-6] 한국과 OECD 국가(평균)의 주요 세원 비중	21
[그림 2-7] 지방정부 사회보장비 비율의 증가 추세	24
[그림 3-1] 국가와 지방의 세입·세출 구조	38
[그림 5-1] 한국지방재정학회(2012)에서 제시한 국고보조사업의 유형과 기준보조율	123
[그림 5-2] 국고보조사업의 유형에 따른 기준보조율 적용(안)	124